

전주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최선

안전성 강화·사고 예방 위해 주요 교통 시설물·다중 이용 교통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

전주시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 시설물과 다중 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호제어기 △LED 신호등 △음향신호기 △버스 BRT(버스정보안내단말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역·터미널 △공영주차장 △자전거 대여소 △버스 차

고지 교통 기반 시설물 3만6381개와 65개 시설이다. 교통 시설물 안전 시는 겨울철 취약한 시설물과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주요 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 및 유지관리 상태와 시설물 결함·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 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 시설물과 다중 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전일로타리클럽은 8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해달라며 팔복동 주민센터에 각종 생필품 세트 50박스를 기탁했다.

전일로타리클럽,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취약계층 위해 팔복동 주민센터에 생필품 50세트 기탁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전일로타리클럽(회장 김현배)은 8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해달라며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장진영)에 각종 생필품 세트 50박스를 기탁했다. 전일로타리클럽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팔복동에 여러 차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현배 전일로타리클럽 회장은 “추위는 계절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진영 팔복동장은 “팔복동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해주는 전일로타리클럽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일로타리클럽 회원들의 마음이 수혜자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물품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후원받은 성품은 도움의 손길에 필요한 취약계층 위기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택시기사 위험·결박·금품 갈취한 40대, 징역 3년6개월

홍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아 인전으로 달아났던 40대에 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근)는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20분경 전북 전주시에서 택시를 탄 뒤 임실군까지 간 후 임실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를 홍기로 위협해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기사를 테이프로 묶어 직접 자신이 차를 운전하며 택시 내부 현금과 택시 기사의 카드 등에서 돈을 인출해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를 차에 놔둔 채 시외버스를 타고 인전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날 오전 8시에 인전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그랬나’라며 처벌 불원의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은 천사와 같은 기사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기에 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정과 양형 기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

‘이지콜’ 이용객 30만명 돌파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지난해 대비 4만9000여명 늘어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 ‘이지콜’의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8일 전주시교통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지난해 이지콜 연간 이용객 수는 총 31만8000여 명으로 전년도 26만9000여 명에 비해 4만9000여 명 늘었다.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넘긴 것은 공단이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행 업무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배차시간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10대를 늘리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하는 등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용객 풀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거점 차고지 운영 등 공단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의 성과다. 2020년 4월부터 비활체어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전용 임차 택시의 운행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것도 이용객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이지콜 이용객 수는 사업 시작 첫 해인 2015년(8월 이후 5개월간) 6만 1000여 명으로 시작해 이듬해 15만 5000여 명, 2017년 17만6000여 명,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 ‘이지콜’의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18만3000여 명, 2022년 25만 1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단은 현재 특장 콜택시 63대, 어울림 순환버스 4대, 전용 임차 택시 25대 등 총 92대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해에도 특장 콜택시 2대, 임차 택시 5대 총 7대를 증차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해 이용객 배차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22일 파기환송심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 “파기환송”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진행된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당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시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관례’로 불리는 기존 관례를 인용하며 이 시장이 사용한 표현은 의견의 표명일 뿐, 이것이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지나친 표현의 위축과 봉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동각

내아